

# 2015년 영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이정희 (이화여대 고진로사회권연구소 연구원, 경영학 박사)

## ■ 머리말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14년 영국 노동시장은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영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sup>1)</sup>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경제는 연간 2.6%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의 1.7%보다 높은 것이다. 비교 가능한 통계<sup>2)</sup>가 있는 2013년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독일(0.4%)과 프랑스(0.2%)만이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이들 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영국의 성장세가 월등히 높다. 이탈리아(-1.9%), 스페인(-1.2%), 네덜란드(-0.8%)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4년 3사분기 GDP 분기별 성장세를 G7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1.2%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미국을 제외하면 영국은 캐나다와 같이 0.7%를 기록했다. 프랑스(0.3%), 독일(0.1%), 이탈리아(-0.1%), 일본(-0.5%) 등은 영국보다 낮았다.

고용 사정도 나아지고 있다. 실업률은 5.8%로까지 떨어졌고, 고용률은 73%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현재 보너스를 포함한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차로 앞질러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질임금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1) ONS, Gross Domestic Product Preliminary Estimate, Q4 2014.

2) 유럽통계청(Eurostat);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와 같은 성장세는 2010년 집권한 보수-자민 연립정부가 꾸준히 고강도 긴축재정정책을 펼친 가운데 확인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긴축정책이 고용의 불안정화, 실질임금 하락은 물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4사분기 성장이 3사분기(0.7%), 2사분기(0.8%)보다 낮은 0.5%를 기록해 경제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 둔화세가 경기회복세가 끝이 났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답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 건설, 광산, 에너지공급 등 부분의 성과가 그리 좋지 않지만 영국 경제의 지배적인 서비스 부문이 여전히 활황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영국의 경제상황에 기초해 2015년 영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동향을 전망해 본다.

## ■ 실업률 하락세 2014년 9~11월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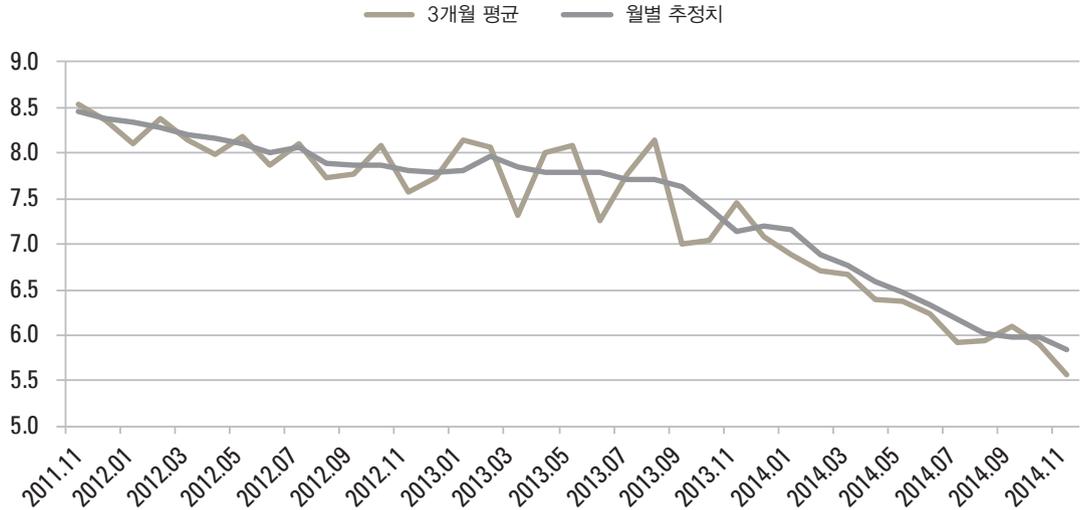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sup>3)</sup>에 따르면,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업은 하락세이다. 이 같은 추세는 2011년 말과 2012년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9~11월 사이, 16~64세 인구 가운데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은 73.0%였고, 1년 전(72.0%)과 견줄 때 1%포인트 증가했다. 고용자 수는 전분기보다 3만 7천 명이, 1년 전과 비교할 때에는 51만 2천 명이 늘어난 3,080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5.8%를 기록했다. 1년 전(7.1%)과 비교할 때 1.3%포인트, 전분기(6.0%)와 견줄 때 0.2%포인트 떨어졌다. 실업자 수로 보면, 1년 전과 비교할 때에는 41만 8천 명이, 전분기보다는 5만 8천 명이 줄어든 191만 명을 기록했다. 실업률 하락세는 2011년 11월부터 분기별 평균 실업률과 이를 월별로 나눠 추정치 값을 살펴본 [그림 1]에서도 확인된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다. 2014년 9~11월 기간 동안 비경제활동인구는 909만 명으로 전분기보다는 6만 6천 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4만 1천 명이 증가했다.

16~24세 청년층 고용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좋아졌지만 전분기와 비교할 때에는 약

3) ONS, Labour Market Statistics, Jan 2015.

[그림 1] 분기별 실업률 추이



자료 : ONS, Labour Market Statistics, Jan 2015.

화됐다. 2014년 9~11월 청년 실업률은 16.9%로 전분기(16.0%)보다 높아졌다. 전년 같은 기간(20.1%)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금융위기 이전, 즉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 기간의 13.8%과 견줄 때에는 여전히 높다.

이 같은 통계청 발표에 대해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 수석 경제학자 마크 비트슨은 “전분기와 견줘 고용상태 인구가 24만 3천 명이 증가했던 6개월 전과 비교할 때 최근 통계는 일자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sup>4)</sup> 이는 또한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구인 일자리 수가 2014년 10~12월 사이에 70만 개나 달한다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구인 일자리 수는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데, 많은 수의 기업들이 작년에 비해 채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영국 상공회의소의 수석 경제학자 데이빗 킨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다가 지난 분기에 상승한 것은 유감”이라며 “1년 전과 비교할 때 청년 실업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성인 실업률보다 높다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sup>5)</sup>

4) 피플매니지먼트 온라인판, More employers ‘face difficulties filling job vacancies’ than last year, 2015. 1. 12.

5) Ibid.

이처럼 분기별, 노동인구별 차이는 있지만 수치로 확인되는 영국 노동시장 상황은 양호해 보인다. 2014년 들어 실업자 수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2014년 6~8월 실업자 수는 197만 명이었는데 이는 이전 3개월(3~5월)보다는 15만 4천 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53만 8천 명이 각각 줄어든 수치이다. 연간 실업자 수 감소폭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 40년 만에 가장 크다. 임금도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0월 현재 임금 인상률은 지난 6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보너스를 포함한 임금은 1.4%(보너스 미포함 시 1.6%) 상승해 물가상승률(1.3%)보다 높았다.

이 같은 수치들 덕분에 정부는 한껏 고무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80만 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기록적인 수치는 다양한 정부의 노동시장 관련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sup>6)</sup> 정부의 장기 경제정책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다시 일자리를 갖게 하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회복세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또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2013년 이래 최저치인 2014년 9~11월 분기 성장률 변화는 영국 경제 성장세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동계는 저임금과 일자리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확보한 회복세는 노동계급은 물론 공공재정과 성장 그 자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7)</sup>

이런 가운데 예산책임청(OBR)은 경제전망<sup>8)</sup>을 내고 2015년 GDP 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고용은 3,120만 명으로 더 늘어나고 실업률은 5.4%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담았다. 평균임금은 2.0%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OBR의 전망치 가운데 2015년 임금은 당초 3.2% 인상으로 예상됐다가 2%로 다시 조정했다는 것과 공공서비스 지출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영국노총(TUC)은 성명서<sup>9)</sup>를 내고 OBR 전망치를 통해 드러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TUC는 실질임금은

6) 피플매니지먼트 온라인판, Unemployment under two million for first time in six years, 2014. 10. 15.

7) TUC 보도자료, Slow recovery linked to low wages, says TUC, 2015. 1. 27.

8) OBR(2014), Economic and fiscal outlook.

9) TUC 보도자료, OBR forecast signals dramatic public service cuts and longer living standards squeeze, says TUC, 2014. 12. 3.

〈표 1〉 경제전망 개요

		전년대비 변화율						
		산출량	전망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불변시장가격 기준 산출량	국내총생산(GDP)	1.7	3.0	2.4	2.2	2.4	2.3	2.3
	실질GDP(2013=100)	100.0	103.0	105.5	107.8	110.4	112.9	115.5
	산출격차(잠재GDP 대비)	-2.2	-1.0	-0.5	-0.5	-0.2	-0.1	0.0
GDP 구성요소	가계소비	1.6	2.3	2.8	2.2	2.4	2.3	2.4
	정부소비	0.7	1.1	-0.4	-0.8	-0.9	-0.3	0.0
	기업투자	4.8	7.7	8.4	6.3	6.3	6.3	6.3
	정부투자	-7.3	2.1	3.3	1.6	2.2	1.6	2.3
	순대외무역*	0.0	-0.2	-0.5	-0.1	-0.1	-0.1	-0.2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CPI)	2.6	1.5	1.2	1.7	2.0	2.0	2.0
노동시장	고용(백만 명)	30.0	30.7	31.2	31.4	31.5	31.6	31.7
	평균소득	1.8	1.8	2.0	3.1	3.9	3.9	3.8
	실업률	7.6	6.2	5.4	5.2	5.3	5.3	5.3
	실업급여수급자(백만 명)	1.42	1.04	0.84	0.83	0.84	0.85	0.86

주 : \* GDP 성장기여분.

자료 : OBR(2014),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다음 국회(2015. 5~2020. 5)가 끝난 뒤까지도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돼 있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다음 국회 회기 말까지도 재정적자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OBR 전망에 따라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더 임금 삭감에 시달려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영국노동총연맹은 “오스본 재무장관은 당초 그의 정책대로 집행될 경우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음에도 계속해서 적자 타령을 하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OBR에 의해 전망된 공공부문 지출 축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영국노동총연맹<sup>10)</sup>은 “인구당 공공부문 지출은 5,650파운드에서 3,880파운드로 축소될 예정”이라며 “이는 (영국 복지체제가

10) Ibid.

확립된) 1948년 이전 수준의 지출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8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 지출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노총은 이러한 공공부문 지출 축소는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막대한 지출 축소로 달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회통합과 안전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영국노총은 현재의 경제성장이 2008년 금융위기를 유발시킨 문제, 즉 가계대출의 증가에서 기인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임금의 질, 고용의 질

성장률과 실업률 등의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성장세의 이면은 영국노총의 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시장 보고서<sup>11)</sup>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불안정, 임시직 일자리가 심각할 정도로 확산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 12명 중 1명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는 영시간호출형 근로(zero-hours contracts), 파견근로, 계약직, 임시직 등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2008년 당시 비정규직 형태로 취업한 남성 노동자는 65만 5천 명인데, 2014년 현재 61.8%가 늘어 106만 명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수 역시 같은 기간 79만 5천 명에서 108만 명으로 35.6%가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 145만 명이던 비정규직 취업자가 2014년에 214만 명으로 48%나 증가한 것이다.

TUC의 새로운 보고서<sup>12)</sup>는 또한 2008년 이래 만들어진 40개의 새로운 일자리 가운데 오직 1개만이 풀타임 일자리를 보여줬다. 순증가 일자리 가운데 60%는 자영업 형태를 띤 1인 일자리였고, 36%는 파트타임이었다. 풀타임 일자리 비중은 확연히 줄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풀타임 비중은 2008년에는 64%였으나 2014년에는 62%로 하락했다. 이는 풀타임 노동자 66만 9천 명이 부족하다는 말과 같다. 다시 말하면,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는 정규직 일

11) 가디언 온라인판, Low pay and zero-hours contracts rise dramatically, figures show, 2014. 12. 13.

12) TUC 보도자료, Only one in every forty net jobs since the recession is for a full-time employee, says TUC, 2014. 11. 12.

자리가 줄어들어 대신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노총은 최근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들 수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두 배나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영업 형태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세금을 회피하거나 노동권을 부여하기 꺼리는 사용자들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영국노총 보고서는 사용자들은 임시직 일자리가 종종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영시간호출형근로 일자리의 44%는 2년 이상, 25%는 5년 이상 그 상태로 지속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영시간호출형근로 종사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3.1%인 100만 명에 달해 2012년 통계청 발표보다 네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립정부 참여당인 자유민주당 소속 빈스 케이블 산업부장관은 영시간호출형근로 종사자들은 유기계약자로 전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노동당은 영시간호출형근로자로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 일자리로의 전환을 요청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정책으로 입안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영국노총은 보고서에서 ‘여성과 불안정고용’이라는 섹션을 별도로 만들어 특히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을 고발하는 한편, 서면계약 체결, 최저임금 적용, 4년간 일한 뒤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sup>13)</sup> 영국노총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기도 한 프랜시스 오그레이디는 “영국에서 유연성(flexibility)이란 말은 사용자가 명령만 하면 달려가야 하는 상황(at the beck and call of employers)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인다”라며 “여성들이 많은 도소매업이나 사회돌봄산업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있는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기술과 생산성

노동계는 일자리의 질, 실질소득의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논의는 기술, 생산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한 고비 벗어남에 따라 향후

13) 옵서버(Observer) 온라인판, Low pay and zero-hours contracts rise dramatically, figures show, 2014. 12. 13.

기업 운영에서의 자신감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기술력 확보가 2015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전 세계 1,322명 최고 경영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PwC 연차보고서<sup>14)</sup>에 따르면, 영국 최고경영자들의 95%는 앞으로 3년간 자신들의 기업 성장에 대해 자신이 있다(52%는 ‘매우 자신 있다’고 답함)고 답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92%)보다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력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영국 경영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조사에서 64%였던 빈도는 올해 조사에서 84%로 증가했다. 전 세계 평균(73%)보다 높을 뿐 아니라 프랑스(37%), 독일(54%), 스페인(53%)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은 월등히 높았다. 정부가 기술력 있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노동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 우선과제로 삼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67%로 지난해 조사 때(60%)보다 증가했다. 정부가 이미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6%에 그쳤다. PwC UK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세계적인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대로 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기술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들이 장기적인 영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sup>15)</sup>

기술과 생산성이 영국 경제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것은 2014년 12월 3일 발표된 추계 경제 운용방향 및 정책(Autumn Statement)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낮은 물가상승률, 낮은 실업률, 높은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면서 “영국의 미래는 국민들의 손에 있고 (기술 향상 등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6)</sup> 그는 영국의 글로벌혁신지수가 2010년 14위에서 2014년에 2위로 향상된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연구 및 개발에 추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예컨대 맨체스터 헨리 로이스 연구소(재료과학연구소) 건립에 2억 3,500만 파운드를, 뉴캐슬의 노화연구소에 2천만 파운드를 각각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CIPD의 마크 비트슨은 “영국 경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고용성장세가 1988년 이래 최고치임에도 기업의 이윤율과 생산성 수준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작

14) PwC(2014), 18th Annual Global CEO Survey.

15) CIPD, Dearth of skills biggest concern for UK leaders, PwC research reveals, 2015. 1. 22.

16) CIPD, Chancellor pledges skills and productivity boost in Autumn Statement, 2014. 12. 3.

업장 내 관행들을 개선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경영진의 요구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 기술을 작업장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영국의 기술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up>17)</sup>

## ■ 5월 총선과 노사관계

노동시장 전망에서 놓칠 수 없는 대목은 바로 정치 일정이다. 올해에는 5월에 총선<sup>18)</sup>이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에 기반을 둔 일간 가디언지가 예측한 총선 결과<sup>19)</sup>에 따르면, 노동당과 보수당이 막상막하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안정된 정부를 꾸리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2개 당 연립이 아닌 다수당 동맹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당과 보수당이 확보할 의석은 동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차범위는 있지만 각각 273석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 정당이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과반의석(326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10년 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보수당에 대한 지지가 추락한 반면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에 대한 지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수당은 2010년 선거 때 확보한 의석을 33개 잃는 대신 노동당은 15석을 더 얻는 것으로 조사됐고,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무려 43석을 추가로 확보해 총 49개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표 2 참조). 2010년 선거에서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꾸린 자유민주당(LibDem)은 절반 이상의 의석(29개)을 잃어 올 총선에서는 28개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스코틀랜드 독립당은 현 데이비드 카메론의 보수당이 아닌 노동당과 공동행보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총선 이후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독립당 연립정부가 가장 가능성 있는 정부 구성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기까지는 4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닉 클레그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향후 정부 구성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우

17) Ibid.

18) 투표는 5월 7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시작된다.

19) 가디언 온라인판, Election polls point to Tory-Labour tie and three-party alliance, 2015. 1. 28.

〈표 2〉 여론조사에 기반을 둔 가디언지 총선 전망치

	보수당	노동당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자유민주당 (LibDem)	영국독립당 (UKIP)	녹색당	기타
2015년 예상치	273	273	49	28	5	1	21
2010년 총선 결과와의 비교	-33	+15	+43	-29	+5	(nc)	

자료 : 가디언 온라인판, Election polls point to Tory-Labour tie and three-party alliance, 2015. 1. 28.

성향의 영국독립당의 약진도 눈에 띈다. 영국독립당은 2014년 유럽의회선거에서 27.5%의 지지를 얻어 108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노동당과 보수당이 아닌 정당이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 하원의 지역구 선거는 최대 득표자가 당선되는 시스템(first-past-the-post)이기 때문에 영국독립당(UKIP)에 대한 평균적인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의석으로서는 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 이 당은 2014년 보궐선거에서 보수당에서 이적한 현역 의원이 한 선거구에서 당선됨으로써 하원에 1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녹색당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브라이튼 지역구에서 계속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디언은 “이 분석은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하원 650석 가운데 50석이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선거일까지 3개월여 동안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올 총선은 유독 최종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2개 주요 정당(노동당과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꾸릴 수 있는 (2분의 1) 정당으로 꾸려진 시스템에서 6개의 정당이 혼합된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 총선은 시작 전부터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총선<sup>20)</sup>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지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당이 최다 의석을 확보하는 당이 될 것인지, 또한 어떤 당과 연정을 꾸릴 것인지는 향후 5년간 영국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다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20) 2010년 총선 결과 연립정부가 구성되긴 했지만 선거 전에는 보수당의 압승이 점쳐졌다. 하지만 보수당은 의석수에서 1위는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해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보수당의 공약은 노동권 제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수당은 다시 집권하게 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sup>21)</sup> 현재 영국에서 파업 또는 다른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조들은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재적 조합원 대비 투표 참가율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보수당은 이 때문에 파업이 자주 발생하여 보건, 교육, 교통, 소방 등 핵심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 재적 조합원 40% 이상의 투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또한 파업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파견노동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같은 사안에 대해 파업이 결의됐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rolling mandates) 역시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보수당 소속 교통부 장관은 “파업에 찬성한 적은 수의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때문에 온 나라가 불모로 잡혀 있다”고 비난했다.<sup>22)</sup>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행된 102건의 파업 찬반투표 가운데 약 3분의 2가 조합원 절반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전체 조합원 수 대비 저조한 파업 찬성률은 노조가 파업을 수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보수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정부와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옮기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CIPD 노사관계전문가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법적 파업 요건을 강화할수록 비공인파업(wildcat strike)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사 대립을 확산시켜 분쟁이 정치적 이슈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업률 등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영국의 고용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경제성장률이 높고,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뚜렷한

21) CIPD, Conservatives promise harsher curbs on public sector strike action, 2015. 1. 12.

22) Ibid.

---

하락세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0월 현재 수치상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기록되는 등 정부로서는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나 임금의 질 측면에서 보자면 분석은 달라진다. 2008년과 비교할 때 2014년 비정규직 취업자는 48%나 증가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40개 중 단지 1개만이 풀타임 일자리일 정도로 일자리의 불안정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임금 역시 인상률은 회복세라고 보고되고 있지만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파트타임 노동자 수가 금융위기 전보다 두 배나 늘었다는 것은 현재의 임금만으로는 가계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부름만 기다리는 호출형 노동에 종사하면서 극단적인 불안정 고용에 놓여 있다.

곧 선거다. 과반 의석을 차지할 정당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선거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각 당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향후 5년 영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LI**